

보도시점 (온라인) 2026. 3. 26.(목) 12:00
(지 면) 2026. 3. 27.(금) 조간

전세 사기 막고 빚길 사고 예방까지 '데이터'로 국민 일상 살린다

- 행안부, 684개 기관 대상 '2025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결과 발표
- 전체 평균 점수 꾸준히 상승, 우수 사례 확산 및 미흡 기관 맞춤형 지원

< 2025년도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사례 >

(해양수산부) 어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 감독을 위한 데이터 분석

- 면세유 부정 유통 상황을 조기에 식별하고 감독하기 위해 면세유 거래 데이터, 선박 운항·입출항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하여 선박, 시설 등 약 5.5만개 공급 대상과 112만건 거래 이력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상·이상 패턴 분석
- 조업시간, 연료 공급량 불일치 등 이상 패턴을 분석하여 부정 사용 지역 등 이상 탐지 모델 구축, 이상 패턴 유형을 특정하여 점검 기초자료로 활용

(서울특별시) 전세사기 위험 분석 보고서 서비스

- 임대차계약 전에 주택 위험 요인을 확인 할수 있도록 '전세사기 위험분석 서비스' 제공
-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 약 1,500명의 데이터 분석 후, 신용점수, 채무불이행 현황, 신용불량정보, 세금체납 등 집주인 정보 11개 및 근저당 등 주택정보 13가지 항목 제공
- ※ 내집스캔(naezipscan.com)을 통해 서비스 제공 중
- 임차인이 사전에 임대인의 숨겨진 위험 징후를 인지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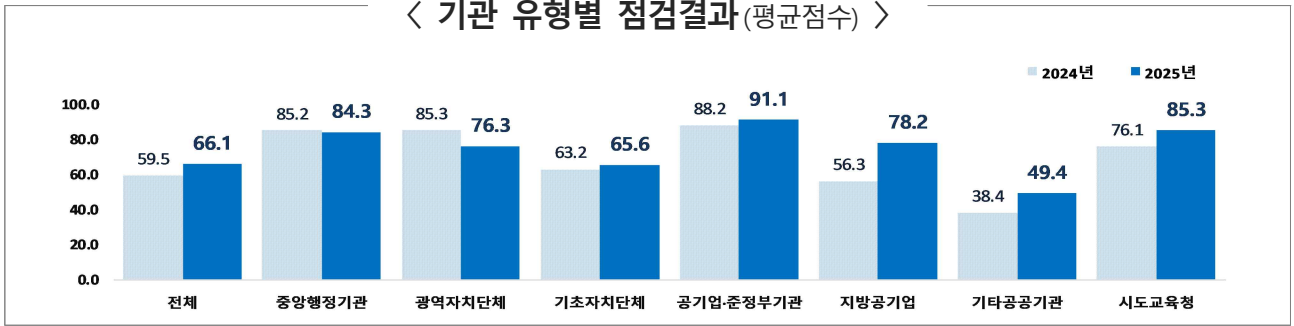
(한국도로공사) 눈으로 보이지 않던 교통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디지털 도로안전진단

- 차량형 라이다(LiDAR) 장비로 수집한 도로형상 데이터를 3D 모델로 구현하고, 사고 취약 구간, 노면 상태, 주행 안전성 등 도로 특성 정밀 분석을 통한 사고 원인 진단
- 빚길 교통사고 취약 구간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빚물 재유입 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확충 등 사고 유발 요인에 대한 근본적 개선대책 시행(대전, 담양 등)
- 전국 도로(국도, 지방도 등)로 확산 적용하기 위해 디지털 교통시설 안전진단 시범사업(국토부, 국토관리청 협업) 추진 예정

- 정부는 공공기관의 데이터 활용 실태를 꼼꼼히 점검하여 우수 사례를 확산하고,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과학 행정을 구현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총 68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이하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 실태점검은 2021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데이터 분석·활용, △데이터 공유, △관리체계 등 3개 영역 11개 지표를 점검했다.
 - * 데이터기반행정: 데이터를 가공·분석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
 -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AI 학습용 데이터 제공'과 'AI 도입·활용', '가명정보 제공' 등의 지표를 새롭게 도입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한층 높였다.

<공공부문 데이터 역량 전반적 향상, 기관 간 서비스 격차 해소는 속제>

- 전체 기관의 평가 결과, 평균 점수는 66.1점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오름세를 보였다. 우수 등급* 기관의 비율은 절반 가까이(49.4%) 늘어난 반면, 미흡 등급**은 크게(31.0%) 줄어 공공부문의 데이터 활용 역량이 탄탄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 최근 3년간 전체 평균 점수 : '23년 57.4점 → '24년 59.5점 → '25년 66.1점
 - * '우수' 등급 이상: '24년 43.2% → '25년 49.4%, ** '미흡' 등급 이하: '24년 44.0% → '25년 31.0%
- 중앙행정기관(84.3점)과 공기업·준정부기관(91.1점), 시도교육청(85.3점)은 평균 8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으며 데이터 공유와 활용 문화가 잘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 광역자치단체(76.3점), 기초자치단체(65.6)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지방 공기업(78.2점)은 전년 대비 성과 향상 폭이 두드러져 '미흡'에서 '보통'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 다만, 기타공공기관(49.4점)은 평균 점수가 전년 대비 11점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미흡' 등급(60점 미만)에 머물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관 자체 노력과 함께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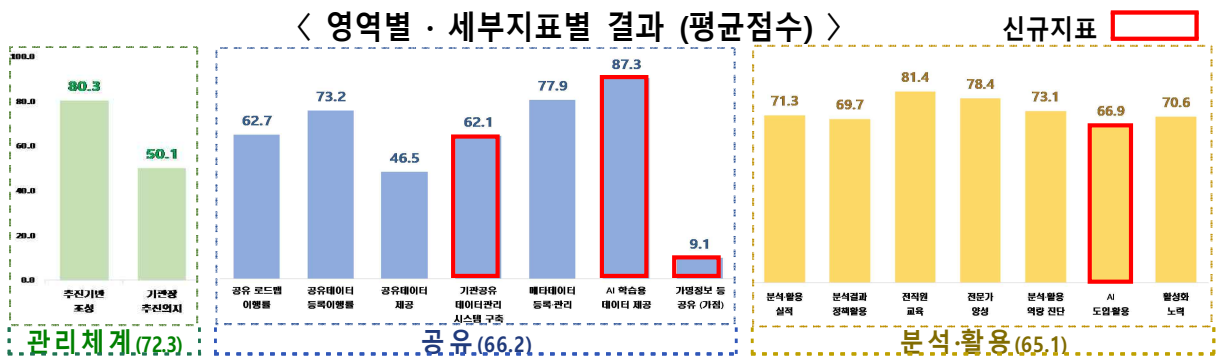
〈추진 기반은 탄탄, 인공지능(AI) 등 전문 분야는 과제〉

□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관리체계(72.3점), 공유(66.2점), 분석·활용(65.1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공유와 분석·활용 영역은 전년 대비 개선 흐름을 보였다.

※ (관리체계 ↓) '24년 77.8점 → '25년 72.3점, (공유 ↑) '24년 61.8점 → '25년 66.2점, (분석·활용 ↑) '24년 56.3점 → '25년 65.1점

○ 관리체계 영역은 전담 조직과 인력 운영 등 추진기반 조성 측면에서는 양호한 수준을 보였으나, 기관장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 의지는 더 보완해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 데이터 공유 및 분석·활용 영역은 기관들의 추진 노력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준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신규지표인 인공지능(AI) 도입·활용 실적이나 가명정보 제공 등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분야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다.



〈성과 중심 평가 체계 개선 및 맞춤형 지원 확대〉

□ 행정안전부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역량이 부족한 기관에는 1대1 맞춤형 교육과 원인 진단, 실행방안 등을 제공하고, 우수 기관의 사례를 공유하여 행정 서비스의 상향 평준화를 이룰 계획이다.

- 아울러, 앞으로는 데이터의 양적인 확보보다는 실제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살피는 성과 중심의 평가로 전환하여 인공지능(AI) 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할 예정이다.
- 각 기관별 평가등급 결과 등 세부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www.mois.go.kr / 뉴스·소식 > 알립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역량은 향상되고 있지만, 기관 간 역량 격차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면서 “역량이 부족한 기관에는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도입으로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인공지능정부실 공공데이터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전한성 (044-205-2461)
		담당자	사무관	윤원정 (044-205-2463)



□ 평가 개요

- (목적) 행정·공공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정책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환류 체계를 통해 관련 정책 개선 및 이행력 제고
 ※ 근거 : 「데이터기반행정부」 제22조(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

전년 대비 달라진 점

- (정책환경 변화 반영) 공공 AI 도입·활용 촉진을 위해 AI 학습용 데이터 제공, AI 도입·활용 성과, 가명정보 제공 및 합성데이터 공유 실적 등 지표 도입
- (질적평가 강화) 분석결과의 정책 활용 성과 및 양질의 공유데이터 제공 노력 등 노력·성과 중심의 질적 평가 비중을 높여 평가 변별력 및 난이도 제고
- (평가등급 세분화) 기관 간 수준 차이를 보다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기관의 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3등급'에서 '5등급' 체계로 등급 세분화

- (대상) 684개* 행정·공공기관
 * 중앙(47), 광역(17), 기초(226), 공기업·준정부(88), 지방공기업(47), 기타공공(242), 시도교육청(17)
- (평가영역 및 지표) 분석·활용, 공유, 관리체계 등 3개 영역 11개 지표

영역	평가지표
분석·활용	▲ 데이터 분석·활용 실적 및 성과, ▲ AI·데이터기반행정 리터러시 및 교육 실적,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노력 및 실적
공유	▲ 공유데이터 구축 로드맵 수립이행 및 등록이행률, ▲ 공유데이터 제공 노력 및 실적, ▲ 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실적, ▲ 메타데이터의 등록 및 관리, ▲ AI 학습용 데이터 제공 실적, ▲ 가명정보 제공 및 합성데이터 공유 실적(가점)
관리체계	▲ 추진기반 조성, ▲ 기관장 추진 의지

- (평가등급) 매우우수(95점 이상), 우수(95점 미만 80점 이상), 보통(80점 미만 60점 이상), 미흡(60점 미만 40점 이상), 매우미흡(40점 미만)

□ 점검 결과 (요약)

구분 (기관수)	매우우수(34개)	우수(304개)	보통(134개)	미흡(64개)	매우미흡(148개)
중앙행정기관(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3개)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가데이터처 등(36개)	국세청, 법제처, 중소벤처기업부 등(7개)	공정거래위원회(1개)	-
광역자치단체(17)	-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등(10개)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등(5개)	제주특별자치도(1개)	대전광역시(1개)
기초자치단체(226)	충남 금산군(1개)	경기 고양시, 대전 유성구, 전남 영광군 등(87개)	강원 강릉시, 경남 남해군 등(72개)	경기 구리시, 충남 계룡시 등(26개)	경기 연천군, 전북 김제시 등(40개)
공기업·준정부기관(88)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21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등(64개)	(재)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3개)	-	-
지방공기업(47)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2개)	경기관광공사, 대전도시공사 등(29개)	경기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등(9개)	강원개발공사,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등(3개)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충북개발공사 등(4개)
기타공공기관(242)	인천해안공사, 창원진흥원(2개)	국립해양박물관, 노사발전재단 등(69개)	국립암센터, 한국해양진흥공사 등(37개)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31개)	재외동포협력센터, 한국상하수도협회 등(103개)
시도교육청(17)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등(5개)	경기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등(9개)	서울특별시교육청(1개)	경상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2개)	-